

日 수출규제 대응 中企·소상공인 2題

(중기부장관)

# 박영선 “日 보복 단결해야” 대-中企 분업적 협력 강조

# “장사 안돼도 힘 보태야죠” 소상공인 자발적 日 불매

### 日 수출규제 따른 中企 애로청취 간담회

적시성 있는 대책으로 피해 최소화 일본의 공격, 한국 미래산업 정조준 경제 체질 바꾸는 타산지석 삼아야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청취 간담회가 열린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의 핵심을 흔들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청취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는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발미로 해 한국을 다시 공격하는 것이고, 아베의 일본에 의한 경제 공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산업을 최대 5년 안에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 자리는 박 장관이 이들 업종에 종사하면서 일본과 연관이 많은 중소기업 관계자들로 부터 애로를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간담회에는 비엠금속 서병문 대표, 반도 이광옥 대표, 일우정밀 박수종 대표, 엔케이산기 박태욱 대표, 서경브레이징 신영식 대표, 화인코팅 지주환 대표, 에스다이아몬드공업 고영길 대표, 재원 심정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등 기관에서도 자리를 함께 했다.

에스다이아몬드공업 관계자는 “관련 제품 100% 국산화를 위해 인건비 등 공동개발을 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1년간 중지했다가 올해 초부터 개발을 다시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일본의 경제 보복이 불거져 국산화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의 맞춤형 지원과 속도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도체 가공 공구 전문회사인 에스다이아몬드는 일본이 독점 생산·공급하고 있는 반도체 웨이퍼 백그라잉딩 휠 관련 공구를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 현재까지 70% 정도 마무리했다. 100% 국산화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맞았고, 이에 따라 마음이 더 바빠졌다.

박 장관은 “우리가 이 파고를 넘기 위해선 더 단결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위기를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앞서 중기부가 지난달부터 각 지방중기청에 설치, 운영에 들어간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7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당장 수출 등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접수보다 7건 대부분은 일본의 기업들이 과거보다 다른 서류 등을 요구했다든가, (수출 등의 과정에서) 불편한 조건 등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이번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대책을 적시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성남 한 주유소 ‘일본차 주유 NO’ 현수막 “주유 막진 않지만 경각심 차원 퍼포먼스” 소상공인聯 “선의의 피해 입는 업종있어 불매운동 업종별·지역별 자율 결정토록”



주유소운영협동조합 김문식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 성남의 주유소에 ‘일본 차 주유 NO!’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것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놓고 불거지고 있는 범국민적 불매운동에 동참의 뜻을 표했다./김문식 이사장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소상공인들도 뿔이 나고 있다.

일식집, 일본인 대상 숙박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이번 사태로 일부 타격을 입고 있지만 또다른 소상공인들은 나라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매운동’에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하면서 뜻을 같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6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주유소운영협동조합 김문식 이사장은 자신이 경기 성남에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에 지난 주말 ‘일본 차 주유 NO!’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 이사장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라도 참여하고 싶어 현수막을 제작했다”면서 “그렇다고 들어오는 일본차를 막고, 아예 주유까지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일본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남 여수에 있는 한 주유소도 김 이사장과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주유소에 석유 업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 석유사업법상 특정 일부에 대해 주유를 확대하는 것은 ‘차별금지’에 해당되지 자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은 “우리가 장사꾼이다. 들어오는 (일본)차를 막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을 정부가 모른채 하긴 커녕 나서면서까지 막아선 안될 일”이라면서 “동참하겠다는 주유소도 있어 불매운동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관련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출 규제 등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난 주말 실태조사에 자체적으로 착수했다. 설

문에는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자체적으로 대응책은 있는지, 또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에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 지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자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백색 국가 제외 조치는 대일 무역이 심각하게 차질을 빚어 우리나라 제조업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연쇄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면서 “경기침체로 가뜰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게 되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개정안 공포 이전에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단체를 활용해 이번 불매운동에 적극 나서길 바라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불매운동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 회원 업종도 있는 만큼 연합회가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업종별,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의 경우 자영업비서관실을 통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일본 불매운동 동참을 내심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 기자

## 이주열 “외환시장 안정 중요... 유동성 관리” “日 수입 비전략물자 국산화”... 정부에 건의

(한국은행 총재)

### >> 1면 ‘韓日 갈등 이어’서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며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고 공격했다.

이 영향으로 같은 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767.27포인트(2.90%) 급락한 2만5717.7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87.31포인트(2.98%) 하락한 2844.7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78.03포인트(3.47%) 급락한 7726.04에 각각 마감했다.

아시아 증시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코스피지수는 29.48포인트(1.51%) 하락한 1917.50에 장을 마쳤다.

일본 닛케이 225지수, 홍콩 항셱지수, 상하이종합지수 등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이 총재는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하는 한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콜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급준비금시장의 자금을 여유롭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한은은 통화량과 금리를 조정하기 위한 통화조절용 수단으로 시중은행에 RP를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기자금이 부족할 때 한은은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지방채 등을 매입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고 이후 유동성이 풍부하면 다시 환매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한다.

한은은 그동안 단기금융시장인 지급준비금시장에서 7일 만기의 RP, 28일 만기의 통화안정증권 등을 발행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며 콜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해 왔다. 중앙은행이 RP 매입을 고려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희주 기자 hj89@

### 더불어민주당 日 대책특위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전략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전략물자도 국산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대책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수입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대한민국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인식했다”며 이같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제외 결정에 대해 관련 전략물자 수는 1194개 중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세분화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 간사는 “나머지 1000여개 항목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즉시 국산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외 품목의 경우 비전략물자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청사간 영상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손진영기자 sonj@

지만, 일본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수입 다변화 등을 검토·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간사는 그러면서 “특정 항목과 관련해서 한국 기업이 경영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특위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거래 중단 위험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방사성 물질 검출 등에 대한

일본 지역 여행 규제 필요성도 정부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간사는 브리핑 후 “일본 여행 규제와 관련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해 (여행 규제를) 검토해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의 규제가 적절한지는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사능 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부연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